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추진상황 평가와 향후과제

한무호(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I. 서 론

지금까지 추진된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한 공간적 산업입지정책이 그 근간을 이뤄왔다¹⁾. 반면 지역내 경제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경제정책은 매우 미흡했거나 전무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²⁾. 왜냐하면 그 동안 추진된 지역경제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한 물리적 생산기반조성이거나 국가 전체적인 산업진흥과 국토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역(지역민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 의한 자생적 지역경제정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원정책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하향적 정책기반구축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스스로의 정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의 확보(지방분권)

- 1) 우리나라 지역경제정책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활동의 효율화와 국가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인구 및 산업의 지역간 편중으로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지역산업의 침체 내지 공동화는 지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발전과정	· 자립경제 기반구축 및 산업구조 근대화	· 중화학공업기반 확충을 위한 임해공단 조성	· 공업의 지방분산 및 중소공단 조성	· 산업의 첨단화, 복합화를 통한 산업발전 도약
정책목표	· 수출산업단지 조성 · 경공업 입지	· 중화학공업 육성 · 산업의 적정 배치	· 인구의 지방정착 · 개발가능성의 확대	· 지역간 균형발전 · 벤처기업 창업 촉진
입지정책개요	· 일부 대도시 지역에 개별입지 형태로 공장집중 · 국가기간산업 육성과 함께 계획입지 형태의 공업단지 조성	· 대도시공업분산을 위한 지방공업단지 개발 · 중화학공업화 추진	· 중소공업단지의 지방 분산배치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한 수도권 개발규제 · 농공단지 조성	·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 지식집약산업의 기반구축 · 서비스화 중심의 Software형 산업 육성
정책사례	· 울산공업단지 조성 · 수출공단조성	· 대규모 공단 조성 · 수출자유지역	· 서해안 대규모 공단 · 지방공단, 농공단지 활성화	· 첨단산업단지 조성 · 테크노파크 조성

- 2) 1960년 이후 30년 동안 추진된 지역정책에서 과연 지방정책이 존재했었는가? 라고 반문할 정도이다.(최상철, 한국적 지역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3권, 1991.6. pp.104~106. 참조)

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와 지역의 욕구를 지방의 시각에서 지방의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의 착근과 자생적(내발적) 지역발전³⁾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화, 개방화 그리고 정보화의 급진전으로 새로운 경쟁체제로의 국제경제질서와 개방경제체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경제정책의 전반적인 틀도 바뀌어야 한다. 지역 내적으로 지역특성과 고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제의 성장과 지역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개방경제에 적극 적응하는 지역의 국제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1년 동안 지역기업 활동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극적인 기업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 충청남도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의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II. 시책의 추진과정과 내용

1. 시책의 추진과정

세계 각국의 국내외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속에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하여 유리한 투자환경을 찾아 나서고 있으며, 세계 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바야흐로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02년 1월 23일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조성

3) 내발적 발전이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외부 대기업유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부의 기술·산업·문화를 토대로 지역산업연관이 존재하는 지역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학습하고 계획하고 경영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사업을 선포하고 각종 규제완화,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개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 시책의 주요내용

충청남도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과 기업유치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5개 분야, 118개의 실천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완화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창업 및 공장설립 분야	①창업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②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단 설립·운영 ③공장설립 추천지역 조사 정보제공 ④창업공장설립 민원 일괄처리단 구성·운영
환경분야	①환경관리 중복 지도·점검 일소 ②재활용 인증제품 구매제도 활성화 ③환경관련 법령해석상 혼선방지 ④환경분야의 법정일지 작성 최소화 ⑤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분야 검토기준 완화
소방분야	①기업체 소방교육 지원 ②방화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건의
산업입지 분야	①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②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 ③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차등화
농림분야	①대체농지 조성비 납부제도 불합리 개선 ②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 완화 ③지자체 농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권한 확대 ④입목축적에 의한 산림형질변경기준 불합리 개선
노동인력분야	①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②노동쟁의 기간중 대체근로자 자격 명문화 ③기업체 작업환경 측정주기 완화
금융분야	①금융기관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 금지 ②부분보증 대출시 담보요구 관행개선 ③회사채 신용평가 유효기간 연장
세제지원분야	①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등 금지 ②경매공장을 취득한 기업의 창업 인정 ③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④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제도 개선
기타 분야	①대전에 집중된 기업교육 시군 분산 개최 ②중요한 법이나 제도 등 변경사항 홍보 ③기업체 단순신고사항 처리절차 간소화 ④원산지 표시관리 처분권한 일원화 ⑤관주도행사에 기업인 참석지양 ⑥법규준수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2) 공무원 행태와 관행개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공무원 교육강화를 통한 기업마인드 제고	①지방공무원교육원 중소기업인 특강 운영 ②기업민원담당장자 교육과정 신설 ③기업민원담당공무원 합동연찬회 개최 ④시군 순회특별교육 실시
경제담당공무원 선진전문 기회 부여	①경제공무원 우수기업 견학 ②기업민원담당공무원 해외 연수 실시
경제담당공무원 장기근속제 시행·사기진작	①경제담당공무원 장기근속제 시행, ②기업유치 및 해외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사기진작
기타	①시군에 대한 도 감사시 감사방법 개선 ②기업인과 공무원의 합동연찬회 개최 ③기업연수 프로그램에 경제공무원 참가

3)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①기업입주시 지역주민 환영행사 개최 ②중소기업 질세지원반 운영 ③도시군정지 기업인상설코너 신설 ④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 우대시책 전개 ⑤기업인 민원창구 개설 ⑥노사화합 선언대회 개최 ⑦도내 농공단지 명칭변경으로 이미지 부각 ⑧충남기업주간행사 ⑨기업인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⑩노사분규 청정지역 만들기 운동 전개

4)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수요에 대비한 산업단지 여력 확보	①신규산업단지 조성 ②대규모 미착공 산업단지 개발 ③농공단지 신규개발
R&D 지역혁신체제 구축	①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센터 설립 ②한국전자부품연구원 분원 유치 ③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 센터 설립 ④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 설립 ⑤유구 자카드직물지원센터 설립
기타	①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일제정비 ②개별입지기업 SOC개선지원반 운영 ③민간개발 전문산업단지 지원

5)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자금지원	①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②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정보공유 협약을 통한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③벤처, 경영안정자금의 금리 1.0% 특별인하 ④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대지원 ⑤충남신용보증재단 기금·지원규모 확대
산업인력 수급체계 확립	①충남산업인력대책협의회 구성 운영 ②지역산업체 우수인력 임용후보 추천제 운영 ③인턴사원제 활성화 ④여성 유휴인력의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 ⑤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 활성화 및 확대 설치 ⑥산업연수생 배정 확대 ⑦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⑧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⑨3D업종 사업장 시설개선 지원 ⑩공공근로 인력 중소기업 지원
기술드라이브 시책전개	①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 운영 ②산학연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③국책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체계 구축지원 ④해외유명규격 및 품질시스템 인증획득 확대지원 ⑤향토지적재산권 권리화 및 상품화 지원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창출	①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②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③벤처투자 재원의 지속적 확충 지원 ④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기회 제공 ⑤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제 구축 ⑥벤처기업 신기술, 신제품 발표회 개최
판로지원	①사이버백화점 구축 운영 ②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 간담회 운영 ③중소기업제품 디자인지원팀 구성운영 ④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제도 강화 ⑤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입점 지원

분야	시책의 주요내용
수출지원	①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확대 ②안정적 수출활동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 ③서울·해외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 통상활동의 체계적 지원 ④중국시장 정보지 발간 배포
외국기업 자유치 환경 조성	①외국인기업전용단지 추가 조성 ②외국인 투자기업 도우미 운영 ③유망투자가 초청 One for One Service 실시
경영 및 정보지원	①산업정보망 구축 운영 ②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e-mail 구축 ③충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확충 ④기업애로도우미 확대 운영 ⑤기업활동 저해사범 합동단속반 운영

3. 시책의 추진내용과 성과

1) 시책의 세부 추진내용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부문	세부 추진내용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조성비 3년 동안 분할납부 보장 • 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흥지역: 2천~2만 이하→3천~3만 이하 -그외지역: 6천~6만 이하→1만~10만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기업 지방이전시 세제혜택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12.31에서 2005.12.31일까지 3년 연장 • 공장설립 승인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처리 없는 공장설립: 7→5일 -의제처리 있는 공장설립: 14→10일 -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 45→25일 • 창업승인기간 단축: 45→20일 • 기타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금지 및 법규준수 기업 인센티브 부여
공무원 행태와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 전문가 등 시군 순회 특별교육 실시 • 기업지원마인드 제고를 위한 경제공무원 우수기업 견학 실시 • 경영마인드 함양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한 기업연수프로그램 참여 • 반려 또는 불승인된 기업민원 확인 중심의 감사방법 개선 •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인, 벤처사업가 특강 및 토론

부문	세부 추진내용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화합선언문 채택 등 노사정 화합 선언대회 개최 • 우수기업인 표창, 애로상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 여성창업강좌, 창업경진대회, 벤처프라자 등 개최지원 • 시군별 지원위원회 구성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기업과 주민간 협조체제 유지 등 역할 수행 •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농공단지 명칭변경 • 도, 시군정지에 「기업인 상설코너」 설치 운영-기여효과, 생산제품 등 홍보 • 「기업인 민원 전담창구」 개설 운영 • 중소기업 「절세지원반」 운영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의 고도화기반 구축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카드직물지원센터(02~07),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02~06), 영상미디어산업 지원센터(02~06), 동물자원사업화 지원센터(03~06)설립 • 공장부지 공급여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 2개 단지 57만평 -대규모 산업단지 : 3개 단지 859만평 -농공단지 : 7개 단지 38만평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일제 정비: 12개 단지 • 개별입지기업 SOC개선 추진: 6개 시군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정보기능대학 개교: 02.3.1(5학과 280명 입학) - 공공근로인력 중소기업지원: 263개업체, 연15천명 - 외국인산업연수생 배정확대 중앙 건의사항 반영 (8만명→13만명 확대, 03년 충남도 배정인원 86.2% 증가) - 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 설치 추진 •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선: 3,000→3,500억원 -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개선: 1,113개 업체 565억원 지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1주년 맞이 추진상황 보고 및 정책 토론회

부문	세부 추진내용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 - 산학연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14개 대학, 27개 센터, 522개 기업 - 국책연구기관과 기술협력체계 구축: 10개 업체, 연구원 11명 전담지원 - 분야별 전문인력 pool제 운영: 산학연 107개 분야, 160명 확보 • 판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백화점 운영 및 입점기업 확대: 109업체→213개 업체 -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제품 디자인지원팀 운영: 제품포장, 홍보 및 팜플렛 제작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청의 구매정보망 활용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호서대 등 2개소 - 중소기업무료 홈페이지 구축 지원: 125개 업체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지원 • 수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 13개 사업 70개 업체 -서울·해외사무소를 통한 중소기업 통상활동의 체계적 지원 -수출활동지원 및 애로해결 -중국시장 정보지 정기발간: Hot-China 발간 • 경영 및 정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정보망 구축 운영: 2,642업체 -중소기업체 대표 e-mail 구축: 3,367업체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확충 -기업애로 도우미 확대 운영: 1,071업체, 391명 -기업활동 저해사항 합동 지도단속 실시 •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천안벨리 조성: 55천평 -창업보육센터 운영: 21개 기관 313개 업체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창업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기획제공 -벤처기업 신기술, 신제품 발표회 개최

2) 주요 추진성과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지역경제정책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규 기업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업여건의 개선, 수도권으로부터의 기업이전과 유치전략 등으로 신규고용 및 소득증대를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업입주 지속적 증가 : 2001년 632개 업체 \Rightarrow 2002년 860개 업체
- 신규고용증가 : 16천명
- 소득증대 : 1,950억원
- 제조업의 생산량 증가 : 2001년 1.2% \Rightarrow 2002년 10.8%
- 수출증가 : 2001년 8,987백만불 \Rightarrow 2002년 10,837백만불
- 산업단지 가동율 : 2001년 91.0% \Rightarrow 2002년 94.2%
- 어음부도율 : 2001년 0.53% \Rightarrow 2002년 0.36%

Ⅲ. 시책에 대한 기업 만족도 분석

1. 조사개요

지난 1년 동안의 시책 추진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 중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시군별,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기업체수에 비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시군에 배포하여 총 312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무응답 등 신뢰성이 낮은 표본을 제외한 225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순 빈도분석과 재정자립도와 각 부문별 만족도간의 관계를 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5개의 시책부문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HP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패키지는 SPSS 10.0을 이용하였다.

2. 분석결과

1) 일반사항

가. 창업 및 이전기업의 충남입지 이유

조사기업체 225개 중 충남에서 창업한 기업은 153개 업체,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 기업은 72개 업체로 조사되었다.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 기업들의 지역 분포를 보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이전이 75.3%(경기 47.9%, 서울 21.9%, 인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대전 6.8%, 충북 4.1%, 경북 2.7%, 경남 2.7%, 전남 2.7%, 전북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업들의 이전 이유로는 용지확보의 용이가 25.2%, 저렴한 지가 16.5%, 노동력 확보 15.7%, 판매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12.2%로 나타났고, 충청남도에 창업한 기업들은 용지취득 용이가 22.7%, 저렴한 지가 18.8%, 지역연고 14.3%, 관련기업 접근용이 12.3%, 노동력 확보용이가 11.7%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 동안 추진된 수도권 규제정책 및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기업입지여건의 개선에 따른 접근성 향상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요소투입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4)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을 실증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수준에서는 서해안지역의 시·군들이 평균 14.3%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되고, 서해안의 5개 시·도내의 시·군간에는 평균 17.9%의 단순시간거리가 단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및 서해안 5개 시·도에서 가장 단축효과가 높은 곳은 충남과 전북으로, 전국에서는 충남이 20.3%, 전북이 17.1%로 나타났으며, 서해안의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1.3%, 전북이 18.3%로 단축효과가 나타났다.(김정연·전영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 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1. p. 86~89쪽 참조)

나. 기업운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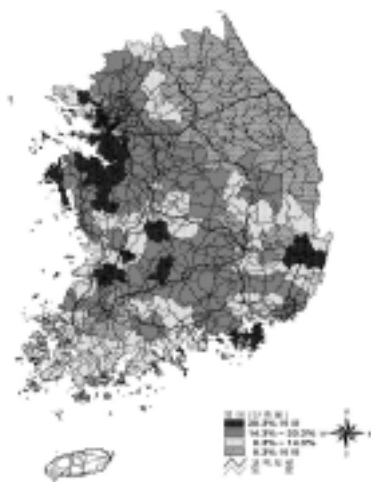
기업의 운영 여건과 관련하여 대체로 만족한다가 67.6%, 만족한다가 18.9%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과 타 시도로부터 이전한 기업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한 기업들이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충남지역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지역 기업환경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통행시간 단축효과

구	분	시·군간 통행시간 ¹⁾		단축시간 (B-A)	단축률(%)
		1995(A)	2010(B)		
전 국 (165시군)	인 천	26,624	23,265	3,359	12.6
	경 기	31,227	25,692	5,535	17.8
	충 남	30,734	24,287	6,447	20.3
	전 북	29,448	24,329	5,119	17.1
	전 남	37,867	33,194	4,673	12.4
	계	32,972	28,336	4,636	14.3
서 해 안 시 · 도 (83 시군)	인 천	16,101	13,911	2,190	13.6
	경 기	14,026	11,639	2,388	17.3
	충 남	12,433	9,691	2,742	21.3
	전 북	12,625	10,279	2,346	18.3
	전 남	17,295	14,493	2,802	16.3
	계	14,433	11,876	2,557	17.9

주: 1) 지역간 평균통행시간은 전국, 서해안의 5개 시·도, 서해안고속도로 영향권 등 각각의 분석대상 지역내의 모든 시·군간의 통행시간의 합을 해당 시·군수로 나눈 것임.



<그림 1> 전국 165개 시·군간
시간거리 단축



<그림 2> 서해안 5개 시·도내
시·군간시간거리 단축

<표-1> 기업유형과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기업유형		
		창업기업	이전기업	전체
만족도	만족한다	34 (22.5)	8 (11.3)	42 (18.9)
	대체로 만족한다	100 (66.2)	50 (70.4)	150 (67.6)
	불만족, 이전검토	17 (11.3)	13 (18.3)	30 (13.5)
전 체		151 (100.0)	71 (100.0)	222 (100.0)

$\chi^2=5.133$, D.F = 2, P=0.077

충청남도에서 기업활동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는 우수인력 확보가 42.2%, 원료공급 및 제품수요처 확보가 19.6%, 관련정보 수집이 11.9%, 기술 개발여건이 8.4%로 나타나 우수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자립도와 기업운영 만족도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연관산업간의 연계성, 우수인력 확보, 제품수요처 확보, 정보의 수집 등 제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여건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기업이 입지 할 수 있는 제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는 다시 기업의 입지행태 및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차별적인 다양한 시책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지역에 따라 인구규모와 재정규모, SOC를 포함한 기업여건, 지역경제문제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만족도 또한 지역마다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적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가 되며, 지역경제를 유지 내지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재정자립도와 기업 만족도간 교차분석을 위하여 2000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를 표준화한 결과 아산시, 당진군, 천안시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연기군, 서산시가 중간 지역으로, 청양군, 부여군,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공주시, 서천군은 낮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표-2> 재정자립도와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재정자립도			
		높은 지역 (25% 이하)	중간 지역 (25% ~ 38%)	낮은 지역 (38% 이하)	전체
만족도	만족한다	11 (13.9)	24 (31.6)	7 (10.4)	42 (18.9)
	대체로 만족한다	58 (73.4)	46 (60.5)	46 (68.7)	150 (67.6)
	불만족, 이전검토	10 (12.7)	6 (7.9)	14 (20.9)	30 (13.5)
	전체	79 (100.0)	76 (100.0)	67 (100.0)	222 (100.0)

$\chi^2=15.511$, D.F =4, P=0.004

2) 부문별 만족도 분석

부문별 추진시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HP기법을 사용하였다⁶⁾.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체들이 느끼는 분야별 중요도는 인프라 확충(23.7%), 중소·벤처기업지원 강화(22.1%), 규제완화(20.9%), 공무원 행태와 관행 개선(17.6%),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15.7%) 순으로 나타났다⁷⁾.

<표-3> 분야별 중요도에 대한 AHP분석 결과

구 분	규제완화	공무원행태	기업인사회	인프라확충	중소벤처기업	중요도
규제완화	1	1.218	1.150	0.892	1.048	0.209
공무원행태	0.821	1	1.165	0.752	0.768	0.176
기업인사회	0.870	0.859	1	0.633	0.672	0.157
인프라확충	1.121	1.331	1.579	1	1.054	0.237
중소벤처기업	0.954	1.301	1.488	0.949	1	0.221

C.R(Cosistency Rario : 일치비율) = 0.0018

6) AHP분석은 중요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40개 업체를 선별하여 분석하였음.

7) AHP분석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C.R. 값은 0.18%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 C.R. 지수가 10% 이내면 일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함.

가. 각종 규제완화시책에 대한 인식

지난 1년 동안의 규제완화시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공장설립분야(82.0%), 환경분야(71.2%), 산업입지분야(65.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림분야, 금융분야, 세제지원분야에서 전년과 동일하다는 의견이 40% 전후를 차지하여 하였으며, 특히 노동인력분야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4>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분	응답업체수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작년과 동일	다소 미흡
창업·공장설립분야	217	18.9	63.1	16.6	1.4
환경분야	222	10.4	60.8	24.8	4.1
소방분야	225	8.9	51.1	36.9	3.1
산업입지분야	220	8.2	57.3	31.4	3.2
농림분야	213	7.0	45.5	43.2	4.2
노동인력분야	220	8.6	45.0	30.9	15.5
금융분야	221	8.6	49.8	38.5	3.2
세제지원분야	220	6.8	49.5	40.0	3.6
기타분야	198	7.6	52.5	33.3	6.6

규제완화 분야와 재정자립도간 교차분석 결과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창업·공장설립분야, 산업입지분야, 세제 및 금융지원분야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환경분야, 소방분야, 농림분야, 노동인력분야, 기타 분야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소방, 농림, 노동인력, 기타분야는 재정자립도가 중간인 지역에서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환경분야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을 제외한 소방, 농림, 노동인력, 기타 분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재정자립도와 규제완화의 분야별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재정자립도			비고
		높은 지역	중간 지역	낮은 지역	전체
환경분야	개선	50 (62.5)	62 (82.7)	46 (68.7)	N=222 $\chi^2=7.974$ D.F.=2 P=0.019
	전과 동일, 미흡	30 (37.5)	13 (17.3)	21 (31.3)	
	미흡	3 (3.8)	4 (5.3)	2 (3.0)	
소방분야	개선	44 (55.0)	56 (73.7)	35 (50.7)	N=225 $\chi^2=9.237$ D.F.=2 P=0.010
	전과 동일, 미흡	36 (45.0)	20 (26.3)	34 (49.3)	
	미흡	5 (6.3)	2 (2.6)	-	
농림분야	개선	36 (47.4)	51 (68.0)	25 (40.3)	N=213 $\chi^2=11.716$ D.F.=2 P=0.003
	전과 동일, 미흡	40 (52.6)	24 (32.0)	37 (59.7)	
	미흡	7 (9.2)	1 (1.3)	1 (1.6)	
노동력분야	개선	36 (47.4)	53 (69.7)	29 (42.6)	N=220 $\chi^2=12.425$ D.F.=2 P=0.002
	전과 동일, 미흡	40 (52.6)	23 (30.3)	39 (57.4)	
	미흡	10 (13.2)	9 (11.8)	15 (22.1)	
기타분야	개선	43 (60.6)	50 (71.4)	26 (45.6)	N=198 $\chi^2=8.741$ D.F.=2 P=0.013
	전과 동일, 미흡	28 (39.4)	20 (28.6)	31 (54.4)	
	미흡	2 (2.8)	4 (5.7)	7 (12.3)	

분야별 만족도와 기업규모간의 교차분석은 환경분야와 기타분야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분야와 기타분야에서는 26인~49인의 기업들이 50인 이상의 기업들에 비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표-6> 기업규모와 규제완화의 분야별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분		기업규모			비고
		50인 이상	26인~49인	25인 이하	전체
환경분야	개선	50 (62.5)	62 (82.7)	46 (68.7)	N=220 $\chi^2=7.974$ D.F.=2 P=0.019
	전과 동일, 미흡	30 (37.5)	13 (17.3)	21 (31.3)	
	미흡	3 (5.5)	-	6 (5.3)	
기타분야	개선	21 (42.9)	31 (66.0)	66 (66.0)	N=196 $\chi^2=8.206$ D.F.=2 P=0.017
	전과 동일, 미흡	28 (57.1)	16 (34.0)	34 (34.0)	
	미흡	7 (14.3)	2 (4.3)	4 (4.0)	

규제완화 시책 중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특히, 노동인력분야에서 산업기능요원 확대(74.5%), 산업입지분야에서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61.0%), 금융분야에서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요구 금지(58.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의 변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7> 향후 중점 추진 시책

구분	향후 중점 추진시책
창업·공장설립분야	· 공장설립 추천지역 조사 정보제공(29.1%) · 창업공장설립 민원일괄처리단 구성·운영(29.1%)
환경분야	· 환경관리 중복 지도·점검 일소(37.9%) · 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분야 검토기준 완화(23.7%)
산업입지분야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지원 범위 확대(61.0%)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31.7%)
농림분야	· 대체농지조성비 부과기준 완화(47.7%) · 지자체 농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 권한 확대(23.4%)
노동인력분야	·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74.5%) · 노동쟁의 기간중 대체근로자 자격 명문화(20.0%)
금융분야	· 금융기관 대출시 과도한 담보요구 금지(58.3%) · 부분보증 대출시 담보요구 관행개선(31.5%)
세제지원분야	·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등 금지(35.5%) · 경매공장을 취득한 기업의 창업인정(26.2%)
기타분야	· 기업체 단순신고사항 처리절차 간소화(38.8%) · 중요한 법이나 제도 등 변경사항 홍보(22.4%)

나. 공무원 행태와 관행개선

공무원의 행태 및 관행은 약간 개선되었다가 58.7%, 매우 개선되었다가 27.6%, 잘 모르겠다가 11.6%, 다소 미흡하다가 2.2%로 나타나,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86.3%를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행태와 관행은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방형 질문에서는 권위주의적인 태도, 전문성 부족, 실무처리 능력 미흡, 업종별 실무 파악 능력 부족 등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나 지역경제관료의 전문성 확보와 실무능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다.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에 대한 질문은 약간 개선되었다가 62.5%, 잘 모르겠다 29.9%, 매우 개선되었다 6.7%, 다소 미흡하다가 0.9% 순으로 나타났다.

<표-8>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풍토 조성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분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잘 모르겠다	다소 미흡	합계
빈도수	15	140	67	2	224
응답비율	6.7	62.5	29.9	0.9	100.0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사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기업과 지역주민간 협력을 위한 기구 및 이해조정 기구 설치, 지역주민행사에 기업인 참여 유도 등 상호 정보 공유 및 협력·조정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주민과 기업 그리고 각자의 이해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에 관한 질문은 약간 개선되었다가 59.5%, 매우 개선되었다 11.3%, 다소 미흡하다 0.5%순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표-9>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분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잘 모르겠다	다소 미흡	합계
빈도수	25	132	64	1	222
응답비율	11.3	59.5	28.8	0.5	100.0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는 국도와 지방도 연결(예 : 동면-공주), 예 인터체인지 신설(예 : 천안-평택 중간지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서류 간소화 등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과의 구축을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공동과제 확립, 소규모 업체에 대한 산·학·연 연계 지원 확대, 산·학·연간 정기적 워크숍 개최, 상호간 정보전달체계 구축, 연구 활동 지원방안 수립,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교육, 연구인력의 지방이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의 경우 자금지원분야(74.1%), 경영 및 정보지원분야(70.0%), 산업인력수급체계분야(57.4%), 수출지원분야(55.7%), 판로지원분야(55.3%), 창업촉진분야(50.9%)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업인력수급체계 및 판로지원은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표-10>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에 대한 평가

(단위 : 개, %)

구 분	응답업체수	매우 개선	약간 개선	작년과 동일	다소 미흡
자금지원	224	14.3	59.8	20.1	5.8
산업인력수급체계	223	6.3	51.1	30.0	12.6
기술드라이브시책	221	5.9	39.8	50.7	3.6
창업촉진	222	5.4	45.5	44.1	5.0
판로지원	219	8.7	46.6	34.2	10.5
수출지원	219	6.8	48.9	37.4	6.8
투자유치환경	214	4.7	41.1	49.5	4.7
경영 및 정보지원	220	10.0	60.0	23.2	6.8

재정자립도와 중소·벤처기업지원 강화와의 교차분석 결과 10%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모든 분야에서 지역간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중간인 지역에서 모든 분야가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술드라이브 정책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분야, 수출지원분야, 외국인기업 투자유치환경 조성분야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낮았다. 또한 자금지원분야, 산업인력수급분야, 판로지원분야, 경영 및 정보지원분야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재정자립도와 중소벤처기업지원의 분야별 만족도간의 교차분석
(단위 : 개, %)

구 분		재정자립도			비고
		높은 지역	중간 지역	낮은 지역	전체
자금지원	개선	57 (71.3)	63 (82.9)	46 (67.6)	N=224 $\chi^2=4.878$ D.F.=2 P=0.087
	전과 동일, 미흡	23 (28.8)	13 (17.1)	22 (32.4)	
	미흡	4 (5.0)	4 (5.3)	5 (7.4)	
산업인력수급체계	개선	39 (49.4)	56 (73.7)	33 (48.5)	N=223 $\chi^2=12.515$ D.F.=2 P=0.002
	전과 동일, 미흡	40 (50.6)	20 (26.3)	35 (51.5)	
	미흡	7 (8.9)	7 (9.2)	14 (20.6)	
기술드라이브시책	개선	25 (32.5)	47 (61.8)	29 (42.6)	N=221 $\chi^2=13.816$ D.F.=2 P=0.001
	전과 동일, 미흡	52 (67.5)	29 (38.2)	39 (57.4)	
	미흡	2 (2.6)	4 (5.3)	2 (2.9)	
벤처기업 창업촉진 성장동력	개선	33 (41.8)	47 (62.7)	33 (48.5)	N=222 $\chi^2=6.942$ D.F.=2 P=0.031
	전과 동일, 미흡	46 (58.2)	28 (37.3)	35 (51.5)	
	미흡	5 (6.3)	5 (6.7)	1 (1.5)	
판로지원	개선	36 (47.4)	54 (71.1)	31 (45.6)	N=220 $\chi^2=12.135$ D.F.=2 P=0.002
	전과 동일, 미흡	40 (52.6)	22 (28.9)	37 (54.4)	
	미흡	10 (13.2)	6 (7.9)	7 (10.4)	
수출지원	개선	31 (41.3)	56 (73.7)	35 (51.5)	N=219 $\chi^2=16.729$ D.F.=2 P=0.000
	전과 동일, 미흡	44 (58.7)	20 (26.3)	33 (48.5)	
	미흡	7 (9.3)	3 (3.9)	5 (7.4)	
외국기업 투자유치 및 환경조성	개선	22 (30.6)	46 (60.5)	30 (45.5)	N=219 $\chi^2=16.729$ D.F.=2 P=0.000
	전과 동일, 미흡	50 (69.4)	30 (39.5)	36 (54.5)	
	미흡	3 (4.2)	3 (3.9)	4 (6.1)	
경영 및 정보지원	개선	52 (68.4)	61 (80.3)	41 (60.3)	N=220 $\chi^2=6.953$ D.F.=2 P=0.031
	전과 동일, 미흡	24 (31.6)	15 (19.7)	27 (39.7)	
	미흡	2 (2.6)	6 (7.9)	7 (10.3)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시책 중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특히, 경영 및 지원분야의 산업정보망 구축·운영(38.7%), 기술드라이브시책 전개 분야에서 산업진흥센터 설립·운영(35.5%), 수출지원분야의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확대(34.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12> 향후 중점 추진 시책

구분	향후 중점 추진시책
자금지원분야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33.9%) ·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정보공유 협약을 통한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23.1%)
산업인력 수급체계 확립	· 산업연수생 배정 확대(24.5%) · 충남산업인력지원센터설치 운영(14.6%)
기술드라이브 시책전개	· 산업기술진흥센터 설립 운영(35.5%) · 산학연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19.9%)
창업촉진 및 성장동력 창출	·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기회 제공(26.5%) · 벤처경영지원센터 운영 활성화(19.1%)
판로지원	·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제도 강화(26.5%) ·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생산업체간 간담회 운영(19.9%)
수출지원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사업 확대(34.2%) · 안정적 수출활동을 위한 수출보험료 지원(30.9%)
외국기업 투자유치 환경조성	· 외국인 투자기업 도우미 운영(39.1%) · 유망투자가 초청 One for One Service 실시(31.9%)
경영 및 정보지원	· 산업정보망 구축 운영(38.7%)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확충(27.1%)

이 외에 제시된 의견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영세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신용대출 활성화, 제품판매를 위한 바이어, 유통업체와의 정기적 미팅 주선, 제품판로지원 확대 등으로 나타나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판로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바. 기타 의견

기타 개선과제로는 산업용 쓰레기 처리문제(산업용 쓰레기 소각로 설치), 기업제품에 대한 책자 및 상시전시회 개최 등 홍보활동 강화, 소규모업체 현황파악 및 실질적 지원책 강구, 유망중소기업 선정 확대, 중소기업 센터 설립 등으로 나타났다.

I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추진 과제

1. 종합평가

수도권 집중 및 규제완화 따른 지역간 불균형은 정보화,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못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역량의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해 볼 때 짧은 기간에 5개 분야, 111개의 구체적인 시책들이 추진되었고, 아직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점이 있었으나 설문조사에 의하면 모든 분야에서 시책추진 결과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정책의 목표와 그 실현수단에 있어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지역경제정책 목표의 재정립

미국의 경우 지역경제정책의 목표는 새로운 지역직업창출, 지역소득증대, 낙후지역 취업 기회 확대, 바람직한 기업경영환경 조성, 여성 및 소수민족의 소기업 경영기회 확대로 요약되고 있으며, 세부목표로는 기존기업의 활성화 및 확장, 새로운 기업창업, 기업유치, 첨단기술산업 육성, 국제교역 진흥, 지역경제기반 강화, 기능인력 양성, 관광산업 육성, 기반산업의 다양화, 기술진흥으로 요약된다⁸⁾.

8) 홍기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제1호, 1998. p.68.

그러나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의 경우는 새로운 지역직업창출이나 지역소득 증대, 지역복지, 지역기반산업 조성에 보다는 제조업 위주의 기업 환경 여건조성과 수도권 소재의 기업유치전략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기반이 양호한 도시지역인 경우는 도시특화산업 육성, 집적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기능을 원활화하게 하는 방안, 또는 도시기반산업 조성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시지역의 경우는 직업창출을 통한 고용증대, 소득증대, 창업의 지원 등에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반면 산업기반이 양호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농외소득 증대나 유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둘 수 있으며, 산업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경우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방안이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13> 지역경제목표 예시

지역 산업기반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업기반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특화산업 육성 · 도시기능 원활화 · 도시기반산업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외소득 증대 · 유효 노동력 활용
산업기반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창출-고용증가 · 소득증대 ·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존자원 활용 · 삶의 질 향상

2) 공간성과 지역간 형평성의 고려

그 동안 우리나라 지역경제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세제지원과 금융혜택 및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이 보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⁹⁾,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의 경우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인력수급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9) 홍기용,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접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권, 1991.6. p.120.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정책수단이 제시됨에 따라 진일보(進一步)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의 효과는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다르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업의 만족도나 개선의 효과는 일률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정책수단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전략과 지역 내 균형개발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즉,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지역별 차등화 된 전략-인센티브 부여, 행·재정지원 등-을 구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정책수단의 다양화

라이트(K. Leicht, 1994) 등은 지역정책수단을 산업유치정책(유자 및 유자보증, 신용회사 설립, 산업공단 조성, 판매세 감면, 직업훈련 등), 기업정책(모험자본 지원, 기술지원센터, 첨단산업 조세감면, 기능인력 공급 등), 노동규제완화 정책(노동법 완화, 환경법 완화, 최소임금제 폐지 등)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¹⁰⁾. 또한 그는 1980년대는 기업유치정책, 1990년 초에는 기업정책, 1990년 말에는 행정규제완화 정책이 우선 순위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라이트의 분류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정책수단은 산업유치정책과 기업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산업유치정책 및 기업정책과 함께 노동규제 완화 정책도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외국인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여성 및 노인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하여 노사분규의 사전예방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10) K. T. Leicht and J. C. Jenkins, Three Strategies of State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8(3), 1994.

4) 지역경제정책의 기본 틀 마련

성공적인 지역경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경제문제는 무엇인가? 지역자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모형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지역경제정책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관련 부서,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정보협의회를 조직하여 제조업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상호 기업간, 산업간, 경제주체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2. 향후 정책추진 과제

1.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지역경제정책의 흐름은 정부개입에 의한 생산비 절감이나, 타 지역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구조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시장개발에 역점을 둔 수요위주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¹¹⁾. 이는 지역경제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특성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충청남도의 지역경제정책 수단은 기업가적 입장에서 기존의 재정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 확충, 규제조정 등 소극적인 공급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서비스 제공, 산업인력의 훈련 및 재교육 실시, 수출시장 및 판로개척, 연구개발 및 개발보조, 개발권 부여, 부동산 관리 서

11) 에이싱어(P. Eisinger, 1988)는 지역경제정책을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공급정책이란 정부정책개입으로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존기업의 활성화와 확장은 물론 타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고, 수요정책은 지역기업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탄력성이 높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질을 향상시킨다는 정책이다.

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등 적극적인 수요정책으로 전환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맞춤형 정책수단의 강구

지역의 기업여건과 특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수요에 부응한 차별화 된 전략이 강 구되어야 한다. 즉, 어느 정도 기업 경제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은 기존 기업 위주의 활성화 정책과 산업구조 개선 정책 위주로 정책수단을 마련하 고, 저개발지역은 경제기반 산업이 부족하므로 새로운 기업 창업과 경쟁력 있는 경제환경 조성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업무를 전담할 특별기관을 설치(예: 영국의 지역 개발청 RDA)하여 위원회에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하고, 지역경제발전계획

영역	공급정책	수요정책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세감면 금융알선 조세유예 채권발행 금융지원 직접융자 부채보조 물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지원 재무회계서비스 훈련 및 재교육 지원 판매대금회수 보장 첨단산업 보육 자본공급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전시회 전문상가 조성 선견지 견학 홍보물(책자, 비디오)제작 영업장소 제공 이벤트 개최(거리축제 페스티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시장 개척 판매공동 노력 각종 위원회 구성 외래구매자 유치 시장규모 확대
행정관리 중앙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사무실 개설 토지이용분류 개선 경제환경개선 환경규제 조정 지역노동제공 지원부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 및 개발보조 모험기업육성 재개발 산업공단관리서비스
토지부동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공급(임대, 무상) 기업재배치 토지개발(사업지구 통합) 토지구입자금지원 토지개발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권 부여 부동산관리서비스 재개발 산업공단관리서비스
사회간접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시설 도로개설 교통체계개선 쓰레기 처리(공중위생) 환경미화 항만 휴식공간 제공 문화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수립에 민간기업, 지역민, 지역단체, 관련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

3. 지역경제관료의 전문성 확보

성공적인 지역경제정책의 요인으로 지방경제관료의 능력, 지방의회의 전문성, 지역 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지방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얽매어 자기개발의 기회가 매우 적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 안식년제 도입을 통하여 정보화, 개방화, 지방화로 인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무부서와 교수, 교육생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장기적인 산업인력수급체계 구축

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

장기적으로 산학연연계 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단기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산·학·연·관 연계체계 구축

충남에서 인력수급문제는 공급체계에 있다기보다는 주문식교육, 인턴ship 제도 활성화 등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인력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¹²⁾.

또한 산학연과의 공동과제 확립, 소규모 업체에 대한 산학연 연계 지원 확대, 산학연간 정기적 워크숍 개최, 상호간 정보전달체계 구축, 연구활동 지원방안 수립, 산업수요에 맞는 학과 교육, 연구인력의 지방이전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식기반경제사회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되어야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설립하고,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등을 정비하고, 유사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제도화하여 업무 이양과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체, 학교, 훈련기관, NGO 등의 지역 공동체를 아우르는 지역 직업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지방고용심의회, 지역 고용촉진 훈련 조정 협의회의 기능도 흡수할 필요가 있다.

12) 충남도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주문식 교육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1년 6월 현재 동우 ENC(주)등 154개 업체에서 주문한 토목측량 외 93개 직종에 천안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14개 실업계고등학교에서 1,88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음. 또한 전문대학으로는 공주영상정보대학, 대천대학, 동양공업전문대학, 신성대학, 연암공업대학, 충청대학, 혜전대학 등 7개 대학에서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한무호, 지방산업인력의 육성 및 공급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1)

【 참 고 문 헌 】

- 김정연·전영노,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영향권 개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3권 제3호, 2001.
- 이두원, 기업의 대 지역사회 관계와 쟁점관리에 관한 연구, 홍보학연구, 1997.
- 정세욱, 지방자치제도 개혁과 자치역량제고,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자치역량제고 방안」 포럼,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2002.
- 홍기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방정부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제1호, 1998.
- _____, 지역경제활성화의 새로운 접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권, 1991.6.
- 한무호, 지방산업인력의 육성 및 공급방안, 충남발전연구원, 2001.
- 최상철, 한국적 지역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역개발 학회지, 제3권, 1991.6.
- 충청남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추진상황 보고자료, 2002.
- Eisinger, Peter, The Rise of The Entrepreneurial Stat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edison, 1988.
- Leicht, K. T. and J. C. Jenkins, Three Strategies of State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8(3), 1994.